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

돌아본 1년, 여성주류화를 위한 과제 / 이미경의원 · 2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명단 · 3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 · 3

여성특위에 회부된 법률안 심사 · 13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2건)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2건)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민법중개정법률안(2건) · 남녀고용평등법및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 호주제폐지에관한청원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 32

여성특별위원회의 상임위 개편추진활동 · 35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상황 지상중계 · 36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관련 법률안 · 43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된 여성관련 서면질문, 청원 및 진정현황 · 44

국회에서의 여성관련발언 지상중계 · 46

여성특별위원회 현안분석 · 51

여성정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제 **13** 호
2000. 12. 9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TEL: 788-2291~2 FAX: 788-3369

<http://www.assembly.go.kr:4000/~woman>

돌아본 1년, 여성주류화를 위한 과제

이 미 경 의원 (여성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



새천년의 시작이었던 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식산업화 시대의 도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새천년이 여성의 세기 될 것이라는 구호가 요란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의 권한척도는 세계 70개국 중 63위로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과제의 우선 순위와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선, 여성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서는 가정과 국가의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입니다. 그 중 가장 잠재력있는 인적자원은 그동안 사장되 다시피한 “여성”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은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고무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신장이며, 인권의 신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에서부터 승진할당제 등과 같은 잠정적우대조치가 보다 과감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남녀차별의식과 관행을 지탱하고 있던 핵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아선호사상을 유지·온존시키고 있는 “호주제”입니다. 결혼하면 여성의 호주가 바뀌고, 어머니·아내가 있어도 갓 태어난 손자가 호주의 1순위가 되는 모순된 제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국가의 법령으로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한 태아성감별과 임신중절이 관행화되어 1년에 3만명이 넘는 여자태아가 살해됩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여성의 주류화”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행정부와 의회, 여성계 등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이 사회(직장)에서 능력껏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만의 고유기능인 “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분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등 관련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미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150억원의 관련예산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9년 인구동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1.42명에 불과하여, 이 추세대로라면 2015년이면 전체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때 대책을 강구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돌아본 1년,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주요과제인 여성부 신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문제 등이 국회에 계류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성 평등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주류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강구할 것입니다. *